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와 대학교육비가 가계재무에 미치는 영향*

Household Expenditures for University Education and Their Effects on Household Finance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문헌나
교수 이희숙

Department of Consumer Studi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 : Moon Han Na

Professor : Hee Sook Lee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II. 문헌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education expenditure and how university education expenditure affected household finance such as total household expenditure after excluding education expenditure, savings, and debts respectively.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8th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conducted by the Korean Labor Institute, and 563 households with children attending university were selected. The t-test, F-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s post hoc test), OLS, and Heckman's two-step estimation were utilized by SAS 9.1 and SPSS 12.0 for Window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verage annual tuition was found to be 6,170,000won(21.5% of total annual household expenditures) and average annual private education expenses were 4,920,000won(15.9% of total annual household expenditures). Second,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levels, the more spent on university education, whereas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level, the lower the household expenditure-to-university education ratio. Third, tuition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had a negative impact on household expenditures after excluding education expenditure.

주제어(Key Words) : 가계지출(household expenditure), 가계재무(household finance), 등록금(tuition), 대학교육비(university education expenses)

Corresponding Author : Hee Sook Lee, Department of Consumer Studi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ungbongro 410, Gaeshindong, Cheongjusi, Chungbuk, 361-763, Korea Tel: +82-43-261-3148 Fax: +82-43-261-7166 E-mail: leehs@chungbuk.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I. 서론

대학교육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은 제 6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자율화의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대학자율화 정책에 따른 대학자율적 등록금책정정책을 허용하게 되었다. 사립대학은 1989년부터, 국·공립대학은 2003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이를 기점으로 대학교육비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연간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전국 대학생 1,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보고서(참여연대, 2008, p. 2)에 따르면 2007년도 고려대 의대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1,288만원에 달해 최고 액수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도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89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전국 가계의 월평균 수입이 326만원인 것(2007년 3/4분기 기준)을 감안하면 대학생 한명 당 평균 2개월분 이상의 수입을 쓰지 않고 모아야 등록금 조달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많은 경우 4개월분 수입을 고스란히 등록금으로 지출해야함을 의미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등록금의 인상폭은 매년 가계소득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는 단순히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이 아니라 개인의 생애소득과 사회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교육은 단순히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적 필요에 의해 인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더욱 조장되고 발전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재원(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 및 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도 기준으로 공공재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 그리스로 대학교육비의 97.9%를 공공재원으로 사용하였으며, 한국은 21.0%로 OECD 평균인 75.7%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계지출 중 차지하는 대학교육비의 비중은 55.6%로 OECD회원국 중에서 최상위를 차지하였다(OECD, 2007).

대학교육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계재무에 매우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며, 이로 인해 교육비 이외의 가계소비지출이 위축되어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과도한 대학교육비의 부담은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에도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대학교육비 실태와 대학교육비가 가계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차경욱과 정순희(2006)의 대학교육비 지불원천(소득, 저축, 학자금대출, 학비보조금)에 관한 분석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를 가진 가계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비 지출 실태 및 대학교육비가 가계재무 즉, 대학교육비

이외의 가계소비지출, 가계의 저축 및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의 대학교육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정부 혹은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교육비로 인한 가계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이끌어 내는데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고찰

1. 교육비 지출 실태

교육비 지출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인숙과 여정성(1996)은 사교육비(학습교육비와 재능교육비) 지출의 전반적인 현황과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초·중·고 학생 자녀를 가진 761가계를 분석한 결과, 학습교육비가 재능교육비에 비해 가계에 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은 초·중·고 학생 자녀에게 조차 학습교육에 치중한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박미희와 여정성(2000)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만 3세부터 대입재수생까지의 자녀가 있는 전국 5,004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비 지출 실태 및 경감방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지출은 각 가계와 개인의 다양한 배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거주하면서 가계소득이 높고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사교육비 지출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가계와 개인들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성림(2002)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를 사용하여 과거 약 20년 동안(1982년~2000년) 가계의 사교육과 공교육을 포함한 교육비 지출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982년 이래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연평균 5%, 공교육비 지출은 2.2%, 사교육비 지출은 11.4%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00년 현재 과거 어느 때보다 교육비 지출수준이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가구주 연령이 45~49세 가계에서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현재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24만원으로 총소비지출의 15%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물가는 연평균 4.9%, 공교육물가는 12.0%, 사교육물가는 7.8% 증가하여 일반물가에 비해 교육비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교육비지출이 명목가치로 연평균 17.0% 증가(실질가치로 5.0% 증가)하여 교육비로 인해 가계가 받는 부담이 점점 증가되는 것으로 나

〈표 1〉 대학생 1인당 교육비 변화 추이

(단위: 천원, 2008년 불변가격)

구분	1977	1982	1985	1990	1994	1998	2001	2008
공교육비(등록금)	2173	2737	2364	2586	2939	3704	3772	6499
사교육비	1237	2274	2431	2622	3492	4635	2685	3386
교육비	3410	5011	4795	5208	6431	8339	6457	9885

출처: 이정미(2008), 대학의 교육비와 수익률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 216.

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김경자(2007)는 2005년도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 중에서 교육비 지출이 있는 서울지역 근로자 가계만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월평균 교육비는 55만 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총가계소비지출액의 22.7%에 해당하였고 이중 64.0%가 사교육비에 해당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교육비 지출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도 해가 거듭될수록 가중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교육비 지출에 관한 연구는 차경욱과 정순희(200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차경욱과 정순희(2006)의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에 등록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육비 지불을 위해 가계에서 사용하는 재정원천의 구성 및 사용비율을 살펴보고, 각 지불원천별로 사용여부 및 사용규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대학교육비 지불원천은 소득, 저축, 학자금대출, 학비보조금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불원천은 저축, 그 다음으로 소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부모의 재정자원을 사용하여 대학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 부모의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저축)의 대부분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부모의 현재 소비지출수준뿐만 아니라 노후의 재무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정부보조학자금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가계가 10%에 불과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또한 이정미(2008)의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등록금)는 평균 6,499천원이며, 국·공립의 경우 3,933천원, 사립대는 7,187천원(국공립대의 1.8배 수준)으로 보고하였다. 사교육비는 대학생 1인당 평균 3,387천원이며 국·공립대학은 3,001천원, 사립대는 3,515천원(국공립대의 1.2배 수준)으로 사립대가 등록금, 사교육비 모두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을 제외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2008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결과, 2008년 현재 공교육비(등록금) 수준은 1977년(30여년 전)에

비해 약 3배 높은 수준이며 1990년(약 18년 전)에 비해 약 2.5배, 1998년(약 10여년 전)에 비해 약 1.8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비해 사교육비는 1977년(30여년 전)에 비해 약 2.7배, 1990년(약 18년전)에 비해 약 1.3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1994년부터 1998년은 2008년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001년에 갑자기 감소하였다가 다시 2008년에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표 1 참조).

차경욱과 정순희(2006)의 연구에서 대학교육비가 주로 부모의 저축과 소득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대학교육비가 가계재무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고, 선행연구 또한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학교육비 지출실태 및 대학교육비가 가계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교육비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행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가계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주직업, 주부의 취업상태, 자녀수, 거주지, 자녀의 학년, 기대교육수준 등으로 밝혀졌다. 김인숙과 여정성(1996)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소득을 비롯한 어머니 교육수준, 거주지, 자녀의 학년, 기대교육수준 변수들이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즉,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강북보다는 강남에 거주할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양세정과 이윤금(1997)은 초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가계소득을 비롯한 자녀수, 자녀성(性)비,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직업, 주거형태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교육비가 증가했지만 그 증가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를 위한 총교육비는 증가하나 자녀 일인당 교육비는 감소하였으며, 자녀의 성별에 따른 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비 지출규모 및 구성비는 모두 증가하였고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노무직에 비해 교육비 지출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자가에 거주하는 가계의 경우 비자가 거주 가계에 비해 교육비 지출규모 및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김민정(2005)은 사회계층별 비목별 소비지출액과 총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있는데, 교육비 지출액은 사회계층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로 가구구성원수(+)와 가구주의 교육수준(+), 거주면적(-), 주택보유여부(핵심적중산층 +, 주변적중산층 -), 가구주연령(-), 자동차보유(-)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비중의 경우는 가구구성원수가 모든 계층에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과 가구주 성별, 자동차소유여부는 주변적 중산층과 비중산층에서만 유의하였으며, 가구주의 연령은 핵심적 중산층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계층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초해 볼 때 대학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가계소득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국립과 사립으로 구분되는 대학유형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이유는 대학교육비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등록금의 차이가 대학유형에 따라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소득수준과 대학유형에 따라 대학교육비 지출실태를 분석하였다.

3. 교육비 지출이 가계재무에 미치는 영향

교육비 지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반대로 대학교육비가 가계재무(가계소비지출, 가계저축 및 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교육비 지출이 가계재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교육비 지출이 가계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역시 주로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의 부담감이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계의 경제적 복지는 연구자에 따라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생활의 질', '경제의 안정성', '가계소득적정도(인지)', '가계경제 안정도', '재정안정도', '재정만족도', '경제생활만족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이승신, 2002).

김시월(1999)은 가정생활주기 중 자녀의 교육기 단계의 가계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부모의 은퇴 후 계획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가계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 및 경제적 복지감은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부담감이 적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

계의 경제적 복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단순한 사교육비 지출액 보다는 그에 따르는 부담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신(2002)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3차(2000년)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실태 및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사교육비가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가계의 70% 정도가 사교육비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서울지역이 기타 지역보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및 부담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담정도가 높은 가계일수록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인식하는 반면, 가족수입 만족도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성림(2005a)은 2002년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부담정도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로 총소비 지출의 약 7.76%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가계에 따라 지출 부담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하였다. 가계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차이의 주된 원인은 자녀의 학년 및 자녀수를 비롯한 거주형태, 거주지역, 거처사용 면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는 가계의 소비생활 전반에 걸친 지출 비중의 조정과 더불어 실제 생활수준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대학교육비가 대학교육비의 액수보다는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가계재무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가계소득, 직업, 거주지역, 자녀수 등의 요인도 가계재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가계의 저축이나 부채, 소비지출 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부모의 노후대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즉, 하나은행과 한국궤협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은퇴준비 현황과 의식구조 조사결과 보고서(서울신문, 2007. 07. 04)에 따르면 현재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은퇴잠재자와 은퇴생활자의 절반정도가 은퇴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현재 은퇴준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써 자녀교육비를 들었으나 이에 대한 조정의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잠재자도 은퇴생활을 위해 자녀교육비를 줄여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자녀교육비를 줄일 의향은 낮았으며 실제 은퇴자들도 다시 은퇴준비를 한다면 자녀교육비를 줄이기 보다는 문화생활비를 더 많이 줄일 것 같다는 반응을 보여 자녀교육비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투자자교육재단(2007, p. 73)의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은퇴 이전에

미리 은퇴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로써 은퇴자의 약 30% 정도가 자녀의 교육비 및 결혼자금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생활비의 여력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40% 정도로 다 많았다. 따라서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부모들의 은퇴대비를 위한 저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비 지출이 저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하준경(2006)과 현대경제연구원(2007. 04. 30, p. 3)보고서에서도 나타났다. 즉, 하준경(2006)은 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가계의 교육비 지출부담은 계속되는 저축률 하락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가계의 재테크 금액 즉, 금융 및 실물자산 관련 투자금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한 이유로써 교육비 부담을 끔 사람이 약 40%로 저축의 최대 장애물은 사교육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2007)에서는 사교육실태조사 및 시장규모를 추정한 보고서에서 가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90년대 중반 7~8%수준에서 2005년 12%까지 급증하여 여타 소비지출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주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저축률을 낮추어(2000년 이전 10% 수준의 저축률이 2006년 5.9%까지 급격히 감소) 노후준비 등 가계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4가구 중 3가구는 사교육비가 부담스럽고 비용마련을 위해 부업을 하는 가계도 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는 가계부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김우영과 김현정(2009, p. 40)에 따르면 가계부채 보유 확률과 부채규모 및 소득대비 부채비율(DTI)은 교육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부채규모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대비 교육비 비율이 높을수록 DTI도 높다고 하였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가계부채에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비 경감정책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다른 비목의 소비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영숙(1999)은 사교육비의 지출이 식료품비나 피복비, 여가활동비 등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사교육비와 공교육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보였다. 즉, 공교육비 지출을 늘려야 할 경우 가계는 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식료품비를 줄여 공교육비로 충당하지만 사교육비의 경우에는 식료품비를 줄이기보다는 저축이나 자산 등을 사용하여 부족한 사교육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사교육비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 동시에 다른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하였다.

한편, 하준경(2006)은 교육비 지출을 인적자본에 대한 투

자로 보고 교육비 지출의 증가 이유를 학력별 임금격차 확대와 경제발전에 따른 사적·사회적 교육투자 수익률의 상승,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보았다. 즉, 학력별 임금격차를 통해서 볼 때 인적자본의 순수익률은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에 비해 더 높으며, 이러한 현상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적자본의 활용기간이 길어지고, 출산율 하락함으로써 '양보다는 질'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교육비가 저축이나 부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에 치중되어 있고 따라서 공교육 안정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교육비에 포함되는 대학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비가 소비지출이나 저축, 부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되고 있지 않다.

4. 가계소비지출, 가계저축 및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의 소비지출이나 저축, 부채 등은 교육비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현자 외(2008)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7차년도 자료로 Tobit 모형의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여 저축의사결정이 유형별 소득과 위험감수도, 재무목표 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저축의사결정을 총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저축여부를 결정하는 1단계와 저축액을 결정하는 2단계, 어떤 유형의 저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3단계와 각 유형별 저축에 실제 가입금액을 결정하는 4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단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소득을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고, 순자산과 위험감수도, 성별, 생애주기, 취업상태, 교육수준, 혼인상태, 자녀유무, 자가보유여부, 과소비여부, 재무목표, 부채유무는 물론, 예적금과 개인연금 보장성 보험, 저축성보험 각각에 대한 가입여부를 함께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소득과 순자산, 생애주기, 교육수준, 취업상태, 교육수준, 과소비여부, 재무목표는 4단계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재산소득은 1단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전소득과 자가보유여부는 3단계의 개인연금 가입여부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혼인상태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유무는 저축유무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후 단계에서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성림(2005b)은 과소비와 부채여부에 따라 과소비·부채가계와 부채가계·무부채가계로 구분하고 부채

가계를 준거집단으로 한 다항로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과소비·부채가계는 일반부채가계에 비해 직업이나 주택소유여부, 자동차보유여부, 가족생활주기, 비경상소득 및 경상소득, 수도광열비나 피복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잡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영향을 받는 반면, 무부채가계는 일반부채가계에 비해 경상소득과 보건의료비 비중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현자(1996)는 총소비지출과 비목별 소비지출에 가계의 부채이용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신규부채수요, 부채부담, 인적소득, 재산소득,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을 투입하였는데 비목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요인이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김우영과 김현정(2009)도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부채유무를 결정하는 데에는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년수, 혼인상태, 가구원수, 취업가구원수, 이사업부, 취업형태, 가구소득분위,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교육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고, 이러한 요인들은 소득대비 부채비율에도 영향을 미치며 부채규모 결정에도 유의한 영향(가구소득분위 제외)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등을 고려하여 공교육비(등록금), 사교육비, 소득, 공교육비의 주관적 부담정도, 가구주 취업여부, 가구원수, 주택소유여부, 맞벌이 유무, 가구주연령제곱, 교육수준, 가구주직업(직업), 거주지역 등을 가계소비지출, 가계저축 및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소득수준과 대학유형을 고려한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를 파악하고 대학교육비가 가계재무 즉,

교육비를 제외한 가계소비지출, 가계저축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가계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2007)의「한국노동패널」자료 중 2005년도에 조사하여 2007년도(제8차)에 일반에게 공개된 것을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1998년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발표하는 것으로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답한 770가계만을 일차적으로 추출하였다. 이 중 산점도를 이용하여 소득이 전혀 없거나 지나치게 많은 가계(outlier)와 본인이 가구주이면서 대학생인 가계 즉, 대학생 세대주 가계 등을 제외하였다. 또한 정확한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와 대학교육비가 가계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가 대학생이지만 휴학 또는 군복무의 사유로 대학교육비의 지출이 전혀 없는 가계를 제외한 총 563가계를 최종 조사대상가계로 선정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이용한 모든 변수의 정의는 본 연구자료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정의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였다(표 2 참조). 변수의 값은 일 년을 단위로 측정되었으며, 월평균 값으로 제공되고 있는 변수의 경우 12개월을 곱한 값으로 하였다.

변수 중 대학교육비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성된다. 공교육비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납부하는 등록금을 말하며, 사교육비는 공교육비를 제외한 학원비, 교재비, 용돈, 차취 혹은 하숙 등을 위한 생활비, 기타 교육관련 잡비 등을 의미한다. 사교육비

〈표 2〉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의
대학교육비	대학생 자녀의 대학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 공교육비(등록금) + 사교육비
공교육비	학교에 공식적으로 납부하는 등록금
사교육비	공교육비(등록금)를 제외한 기타 지출 비용 (학원비, 교재비, 용돈, 생활비, 기타 교육 관련 잡비)
공교육비(등록금)의 주관적 부담	대학교육비 중 공교육비(등록금)에 대한 주관적 부담을 의미하며 '전혀 부담 안됨=1' 부터 '매우 부담=5'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음.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이 많은 것으로 해석됨
가계소득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것으로 다음 소득유형을 포함함 (근로소득 + 금융소득 + 부동산소득 + 사회보험 + 이전소득 + 기타소득)
가계소비지출	가구원의 소비지출을 모두 합한 것으로 다음 지출비목의 소비지출을 모두 포함함(식비+외식비+공교육비(등록금)+사교육비+주거비+피복비+내구재구입비+통신비+차량유지비+대중교통비+경조사비+보건의료비+교양오락비+현금 및 각종 기부금 +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 용돈 + 기타)
가계저축	가구원의 저축액의 합으로 다음 저축유형을 모두 포함함(일반저축+예금, 적금(주택청약부금 포함)+저축성보험+개인연금(국민연금 제외)+갯돈 등)
가계부채	가구원의 부채액의 합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부채액을 포함함(금융기관 부채+비금융기관 부채(회사를 통해 빌린 돈 등)+개인적으로 빌린 돈(사채, 친척/친지에게 빌린 돈)+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갯돈+기타)

출처: 한국노동연구원(2007),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코딩북.

에 포함되는 내용 중 생활비를 제외시키고자 하였으나 자료의 특성상 불가능하였다.

한편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유형은 국립과 사립의 구분을 의미하며, 대학유형에 따라 조사대상가계를 구분하기 위해 대학교명 변수를 기초로 국립대와 사립대로 분류하였으나 대학교명의 변수에 대한 무응답이 100여 가계나 되어 이 가계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분류하였다. 우선, 대학교명에 응답한 가계만을 대상으로 국립, 사립으로 구분한 후 대학유형별로 등록금(표 3 참조)을 산출하였으며, 이와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4, p. 27)에서 발표한 2003년도 등록금 평균자료(국·공립대학 2,902천원, 사립대학 5,775천원)를 고려하여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는 자료로 이용하였다. 위 2개 자료를 기초로 100여 무응답 가계는 연간 등록금 지출액 450만원 이하를 국립대학으로, 이상을 사립대학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대학생자녀가 2인 이상인 가계는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사립대로 분류하였으며 그 이유는 가계 전체의 등록금 지출이 사립대 이상의 수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 3〉 조사대상가계의 대학유형별 연평균 공교육비(등록금)
(단위 : 만원)

대학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국립대(국립전문대포함)	65	334	218	-7.566***
사립대(사립전문대포함)	343	577	240	

*** p < .001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와 SAS 9.1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전체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전반적인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 및 소득수준과 대학유형에 따른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F-test (Duncan 사후검증)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대학교육비 지출이 교육비를 제외한 가계소비지출과 대학교육비를 제외한 가계소비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대학교육비 이외의 소득대비가계소비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교육비를 구성하는 공교육비(등록금)와 사교육비, 그리고 '공교육비(등록금)의 주관적 부담정도'를 포함하여 대학교육비 이외의 가계소비지출, 가계저축 및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인구학적 변수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공교육비(등록금)와 사교육비를 제외한 독립변수를 회귀식에 포함시킨 이유는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의 영향력을 배제한 후, 공교육비(등록금)와 사교육비, 그

리고 공교육비(등록금)의 주관적 부담정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분석에 사용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15} X_{15} + \epsilon$$

여기에서 Y= 대학교육비 이외의 가계소비지출, 대학교육비 이외의 소득대비가계소비지출비율, 가계저축, 가계부채 α = 상수, $\beta_1 \sim \beta_{15}$ = 계수, X_1 = 공교육비(등록금), X_2 = 사교육비, X_3 = 공교육비(등록금)의 주관적 부담정도, X_4 = 소득, X_5 = 가구원수, X_6 = 주택소유여부(준거집단 = 비자가), X_7 = 맞벌이유무(준거집단=외벌이), X_8 = 가구주연령(제공), $X_9 \sim X_{10}$ = 가구주학력(준거집단 = 중학교 이하 vs.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X_{11} \sim X_{12}$ = 가구주지역(준거집단=상용임금근로자 vs.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X_{13} \sim X_{14}$ = 거주지역(준거집단=기타지역 vs.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X_{15} = 가구주취업여부를 의미한다.

또한 대학교육비 지출이 가계저축 및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차경욱과 정순희(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Heckman의 2단계 추정모델(Heckman's two-step estimation)을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모든 가계가 저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계 중 76.2%만이 저축을, 66.3%만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계는 저축을 하거나 부채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두 단계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저축의 경우, 의사결정 첫 단계에서 가계는 저축을 할 것인가 모두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저축을 하게 된다면 저축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채의 경우 역시 의사결정 첫 단계에서는 부채를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두 번째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부채를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부채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Heckman의 2단계 추정모델(Heckman's two-step estimation)은 이렇게 분리된 의사결정 과정에 각각에 다른 통계적 과정을 부여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저축 및 부채의 존재유무

$$P_i^* = X_{pi} \alpha + u_i$$

$$P_i = 0 \text{ if } P_i^* \leq 0$$

$$P_i = 1 \text{ if } P_i^* > 0$$

2단계 : 저축 및 부채 금액

$$Y_i^* = X'_{bi} \beta_1 + \dots + X'_{bi} \beta_{19} + \epsilon_i$$

$$Y_i = Y_i^* \text{ if } P_i = 1$$

$$Y_i \text{ not observed if } P_i = 0$$

저축액 및 부채액의 존재유무를 결정하는 1단계에서의 종속변수는 저축 및 부채가 있는 가계($P_i = 1$)와 없는 가계($P_i = 0$)로 이분화 되며, 저축 및 부채가 있는 가계의 저축 및 부채 금액을 결정하는 2단계에서의 종속변수(Y_i)는 가계의 연 저축액과 부채액이 된다. X_{pi} 와 X_{bi} 는 가계 i 의 저축 및 부채의 유무와 금액에 관한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들이고 α 와 β 는 이들 독립변수들의 계수이다. 독립변수는 앞의 회귀 분석의 독립변수와 같고, 1단계에서는 프로빗(Probit) 분석을 적용하여 저축 및 부채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고, 2단계에서는 회귀분석(OLS)을 실시하여 저축 및 부채 실제 금액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가계 즉,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우선 가구구성별은 남자가 90%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며 가구주 연령은 40~59세가 89.2%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대상가계가 대학생 자녀를 가진 가계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가구주 학력은 중학교 이하 31.4%, 고등학교 42.5%, 전문대학 이상 26.2%이다. 총 가구원수는 4명이 54.4%로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5명 이상의 가계도 26.0%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78.2%가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거주지역은 서울, 광역시, 수도권, 기타 지역이 모두 고른 분포를 보였다. 대학생 자녀수는 1명이 76.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2명이 22.7%, 3명도 차지한 1.2%의 분포를 보였다.

가구의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자가 84.3%이나 비경제활동 동인구도 14.0%나 되었으며 이는 대학생자녀의 교육비가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은퇴 등으로 이미 소득 상실이 된 가계가 14% 정도임을 시사하고 있다. 가구의 일자리 종사상의 지위는 상용임금근로자가 42.8%로 가장 높고 그리고 자영업자가 27.6%로 나타났다(표 4 참조).

2) 조사대상가계의 재무적 특성

대학생 자녀가계의 재무적 특성은 모두 연단위로 분석하였으며 <표 5>에서와 같이, 가계소득은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가 54.7%로 가장 높고 연평균 가계소득은 약 4,050만원으로, 200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연평균 경상소득 3,193만원 혹은 근로자가구 연평

<표 4>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집단	N = 563	%
가구주 성별	남자	511	90.8
	여자	52	9.2
가구주 연령	40~49세	188	33.4
	50~59세	314	55.8
	60세 이상	61	10.8
가구주 학력	중학교 이하	177	31.4
	고등학교	239	42.5
가구원수	전문대학 이상	147	26.1
	2명	18	3.2
	3명	93	16.5
거주지역	4명	306	54.4
	5명 이상	146	26.0
	서울	132	23.4
주택소유여부	광역시	147	26.1
	수도권(경기/인천)	142	25.2
대학생자녀수	기타지역	142	25.2
	자가	440	78.2
경제활동상태	비자가	123	21.8
	1명	428	76.0
가구주 일자리 종사상의 지위	2명	128	22.7
	3명	7	1.3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463	84.3
	실업자	9	1.6
가구주 일자리 종사상의 지위	비경제활동인구	77	14.0
	계	549	100.0
가구주 일자리 종사상의 지위	상용 임금근로자	198	42.8
	임시/일용 임금근로자	55	11.8
가구주 일자리 종사상의 지위	고용주	82	17.7
	자영업자	128	27.6
가구주 일자리 종사상의 지위	계	463	100.0

주. '가구주 경제활동상태'와 '가구주 일자리 종사상의 지위'를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합계는 모두 563이어서 합계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합계가 563보다 작은 것은 무응답에 의한 것임.

균 소득 3,504만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비교연도를 2004년으로 한 것은 본 연구자료가 2005년에 조사된 것이지만 조사시점에서 지난 해 즉 2004년도의 상황을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가계소비지출은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60.6%로 가장 많았고 연평균 소비지출액은 3,088만원이었다. 가계 저축은 1,000만원 이하가 79.7%로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보였고 연평균 저축액은 605만원이었으며, 가계부채는 2,000만원 이하가 60.0%로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보였고 평균은 4,340만원이었다.

공교육비(등록금) 지출액은 연 4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인 가계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600만원 초과~800만

〈표 5〉 조사대상가계의 재무적 특성

변수	집단	N = 563	%	변수	집단	N = 563	%
가계소득	2,000만원 이하	110	19.5	가계 소비지출	2,000만원 이하	111	19.7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308	54.7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341	60.6
	5,000만원 초과	145	25.8		4,000만원 초과	111	19.7
	평균	4,050 만원			평균	3,088 만원	
가계저축	1,000만원 이하	449	79.7	가계부채	2,000만원 이하	338	60.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81	14.4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05	18.7
	2,000만원 초과	33	5.9		5,000만원 초과	120	21.3
	평균	605 만원			평균	4,340 만원	
지출액 (등록금) 공교육비	없음	20	3.6	사교육비 지출액	없음	9	1.6
	200만원 이하	25	4.4		200만원 이하	55	9.8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100	17.8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270	47.9
	4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181	32.1		4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132	23.4
	6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	165	29.3		6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	24	4.3
	800만원 초과	72	12.8		800만원 초과	73	13.0
	가구당 평균	617 만원			가구당 평균	492 만원	
	자녀 1인당 평균	512 만원			자녀 1인당 평균	405 만원	
공교육비 (등록금)의 주관적 부담정도	매우 부담	320	56.8	부채 발생 이유	교육비	75	20.4
	약간 부담	156	27.7		주택마련	95	25.8
	보통	70	12.5		생활비	35	9.5
	별로 부담 안됨	14	2.5		창업 및 사업	77	20.5
	전혀 부담 안됨	3	0.5	기타	86	23.4	
				계	368	100.0	

주. '부채발생이유'를 제외한 재무적 특성 합계는 모두 563이어서 합계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합계가 563보다 작은 것은 무응답에 의한 것임.

원 이하인 가계가 29.3%로 그 다음으로 높은 구성비율을 나타냈다. 한가구당 연평균 공교육비(등록금)는 617만원이었으며, 이를 대학생 자녀수로 나눈 자녀 1인당 연평균 공교육비(등록금)는 512만원이었다. 대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연 2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인 가계가 47.9%로 가장 많았으며, 4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인 가계가 23.4%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가구당 연평균 사교육비는 492만원이었으며, 대학생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연 40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자녀를 둔 가계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비(등록금) 지출이 없는 것은 장학금을 받았거나 회사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자녀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조달하는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대학공교육비(등록금)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질문한 결과, 56.8%가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하였고 27.7%가 약간 부담된다고 답해 전체의 약 85%의 가구가 공교육비(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원인을

질문한 결과, 주택마련이 25.8%, 창업·사업이 20.9% 그리고 교육비가 20.4%를 차지하여 대학생 자녀의 공교육비(등록금)이 가계에 부채의 원인이 될 만큼 지출이 큰 항목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2.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

1)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

대학교육비는 연 1,109만원이며 표준편차는 967만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 중 공교육비(등록금)는 연 617만원(표준편차 491만원)으로 대학교육비의 55.6%를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사교육비는 연 492만원(표준편차 587만원)으로 대학교육비의 44.4%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이는 공교육비(등록금) 이외에도 대학교육을 위한 지출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사교육비는 변수의 정의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대학생 자녀의 용돈, 생활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로의 지출요구가 가계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사교육비의 표준편차는 대학교육비와 마찬가지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와의 대학교육비 지출의 편차가 큼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비는 가계 소득(4,050만원)의 37.4%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공교육비(등록금)는 21.5%, 사교육비는 15.9%를 구성하였다(표 6 참조).

〈표 6〉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 (N = 563)

항목	연간 지출액(만원)		소득대비비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학교육비	1,109	967	37.4	34.1
공교육비(등록금)	617	491	21.5	21.0
사교육비	492	587	15.9	18.1

2) 소득수준별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

소득수준별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가계의 소득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어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구분의 기준은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평균±표준편차(4,050만원 ±2,602만원)와 통계청의 2004년도 가계조사자료의 연평균 경상소득(3,193만원)을 참고하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집단,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중집단, 2,000만원 이하는 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결과, 각 집단의 빈도수는 상집단 145(25.8%), 중집단 308(54.7%), 하집단 110(19.5%)이며, 각 집단별 연평균 가계소득은 상집단 7,485만원, 중집단 3,385만원, 하집단 1,386만원 수준을 각각 보였다(표 7 참조).

소득수준에 따른 대학교육비, 공교육비(등록금)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 모두 동일한 특성을 보였다. 즉, 상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중집단, 하집단으로 내려갈수록 대학교육비의 절대액은 감소하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교육비 지출액은 소득수준 상집단이 1,450만원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집단 1,022만원, 하집단 903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에서 대학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소득대비교육비비율)은 상집단 20.5%, 중 31.9%, 하 75.0%로 반대의 양상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중집단 혹은 하집단의 경우 대학교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률이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소득수준별 공교육비(등록금) 지출실태는 상집단이 평균 76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중집단과 하집단은 각각 572만원, 551만원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사립대학 입학울 결정할 때 자유로울 수 있음을, 다시 말하면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경우 사립대학 공교육비(등록금) 수준이 사립대학으로의 진학 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공교육비(등록금) 비율(소득대비공교육비비율)은 소득수준 상집단이 10.9%, 중집단 18.0%, 하집단 45.2%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 하집단의 경우 소득의 약 50%를 자녀의 공교육비(등록금)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소득이 낮은 가계가 공교육비(등록금)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액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상집단이 687만원으로 중집단 450만원, 하집단 352만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소득대비사교육비비율)은 반대로 상집단에서는 소득의 9.6%, 중집단은 13.9%, 하집단 29.7%를 각각 사교육비로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대학유형별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

대학교육비는 국립대 자녀가계 798만원, 사립대 자녀가계 1,168만원으로 사립대 자녀가계가 국립대 자녀가계에 비해 약 1.5배 정도 대학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에서 대학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립대 자녀가계가 30.1%로 사립대 자녀가계 38.7% 보다 약 8%p 정

〈표 7〉 소득수준별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

항목	전체(N = 563)	상(N = 145)	중(N = 308)	하(N = 110)	F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가계소득(만원)	4,050(2,602)	7,485(2,562) _a	3,385(828) _b	1,386(440) _c	625.2***
대학교육비지출액(소득대비비율)	1,109(37.4)	1,450 _a (20.5 _a)	1,022 _b (31.9 _b)	903 _b (75.0 _c)	13.3*** (128.6***)
공교육비(등록금)지출액(소득대비비율)	617(21.5)	763 _a (10.9 _a)	572 _b (18.0 _b)	551 _b (45.2 _c)	8.9*** (138.7***)
사교육비지출액(소득대비비율)	492(15.9)	687 _a (9.6 _a)	450 _b (13.9 _b)	352 _b (29.7 _c)	12.4*** (50.3***)

주. 같은 아래첨자가 나타내는 평균은 Tukey 검증결과 p<.05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 p < .001

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학유형에 따른 공교육비(등록금) 지출은 당연히 차이가 나타나겠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간 공교육비(등록금) 지출액은 국립대가 322만원, 사립대 67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사립대의 공교육비(등록금)는 국립대의 2배가 넘는 수준을 보였다. 소득대비공교육비(등록금)비율은 국립대 자녀가계의 경우 소득의 12.6%를 차지하는데 비해 사립대 자녀가계의 경우 23.1%로 더 높게 나타났다. 사립대에 재학 중인 자녀가계의 소득은 연평균 4,145만원으로 국립대에 재학중인 자녀가계의 3,552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소득대비공교육비(등록금)비율 수준이 국립대보다 높다는 것은 소득수준이 높다 해도 공교육비(등록금)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국립대 자녀가계보다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사립대 자녀가계의 소득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상대적으로 자녀를 사립대에 보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은 국립대 자녀가계의 경우 연 475만원, 사립대 495만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비율 역시 두 집단 모두 15%~17%의 수준을 보이며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교유형에 따른 교육비지출의 차이는 결국 공교육비(등록금)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반영하고 있다(표 8 참조).

3. 대학교육비가 가계재무에 미치는 영향

1) 대학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에 끼치는 영향

가계에서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대학교육비는 다른 가계지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가계재무 요소 중 대학교육비를 제외한 가계지출액과 대학교육비를 제외한 소득대비가계지출비율을 종속 변수로 하고 대학교육비를 구성하는 공교육비(등록금)와 사교육비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대학교육비를 제외한 다른 독립변수에 포함시킨 것은 순수한 대학교육비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즉,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하였으며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가 0.1보다 작거나, 분산팽창계수(VIF)가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는데(이학식, 임지훈, 2005), 본 연구에서 살펴본 모든 회귀식의 공차한계는 최소값이 .514, 분산팽창계수는 최대 1,946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대학교육비 즉, 공교육비(등록금)와 사교육비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대학교육비를 제외한 가계지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본 결과, 매우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교육비(등록금)와 사교육비의 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지출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좀 더 흥미로운 것은 사교육비가 미치는 영향력($\beta = .334$)이 공교육비(등록금)의 영향력($\beta = .198$)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비(등록금)는 일종의 고정지출의 의미를 갖는 반면 사교육비는 변동지출의 특성을 갖는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공교육비(등록금)는 저축 등으로 미리 준비하여 지출이 이루어진다면 사교육비는 매월 필요할 때마다 지출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다른 가계지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교육비 이외에 가계지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득, 가구원수, 맞벌이유무, 가구주연령, 가구주학력, 가구주지위가 대학생 자녀가계의 가계지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조건하에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계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맞벌이인 가계가 외벌이인 가계에 비해, 가구주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계지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학력과 지위에서는 중학교 이하인 집단에 비해 대학교 이상인 집단에서, 상용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용주인 경우 가계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비를 제외한 가계지출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공교육비(등록금)와 사교육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대학유형별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

항목	대학유형	국립대(N = 90)(국립전문대 포함)		사립대(N = 473)(사립전문대 포함)		t-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학교육비지출액(소득대비비율)		798(30.1)		1,168(38.7)		-3.361**(-2.219*)
공교육비(등록금)지출액 (소득대비비율)		322(12.6)		673(23.1)		-6.430*** (-6.600***)
사교육비지출액(소득대비비율)		475(17.5)		495(15.6)		-.288(.907)

* $p < .05$ ** $p < .01$ *** $p < .001$

〈표 9〉 대학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N = 563)

독립변인	가계지출액(대학교육비 제외)		소득대비가계지출비율(대학교육비 제외)	
	B	β	B	β
공교육비(등록금)	-.604***	-.198***	-8.477E-05	-.082
사교육비	-.851***	-.334***	-1.526E-04**	-.176**
소득	.336***	.584***	-5.345E-05***	-.273***
공교육비(등록금)의 주관적부담정도 (전혀부담안됨=1~매우부담=5)	58.596	-.033	.003	.005
가구주취업여부(비취업)*	68.923	.021	-.018	-.016
가구원수	156.705**	.095**	.059*	.106*
주택소유여부(비자가)*	144.479	.040	.026	.021
맞벌이유무(비맞벌이)*	-168.041	-.056	-.072	-.071
가구주연령제곱	-.132*	-.066*	-4.775E-05	-.071
가구주 학력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179.949	.059	.052
	대학교이상	516.136***	.151***	.112
가구주 지위 (상용임용근로자)*	임시·일용직	137.060	.027	.090
	고용주	303.991*	.072*	.105
	자영업자	114.747	.032	.028
거주 지역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168.920	.048	.030
	광역시	78.708	.023	.102
	수도권	168.729	.049	.045
상수	557.388		.661	
F값	42.138***		5.349***	
Adjusted R ²	.582		.128	

주. *는 가변수(dummy variable)화 한 것임; ()안은 준거집단.

주. B : 비표준화 계수, β : 표준화 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공교육비(등록금)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사교육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교육비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교육비를 제외한 소득대비가계지출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가계지출액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소득대비가계지출비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소득, 가구원수, 맞벌이유무, 가구주학력, 가구주지위, 거주지역이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조건하에 소득이 높을수록, 맞벌이인 가계가 외벌이인 가계에 비해 소득대비가계지출비율이 감소하고 있었으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비지출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학력이 중학교 이하인 집단에 비해 대학교 이상인 집단이, 가구주지위가 상용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용주가, 거주지역이 기타지역에 비해 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소득대비가계지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교육비 지출은 대학교육비를 제외한 다른 가계지출액 뿐 아니라 대학교육비를 제외한 소득대비가계지출비율을 위축시키고 있다.

2) 대학교육비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대학교육비 지출이 가계재무 요소 중 가계저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Heckman의 2 단계 추정모형(Heckman's two-step estimation)을 통해 분석하였다(표 10 참조).

Heckman의 1단계 분석에서 가계저축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공교육비(등록금)와 사교육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소득이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독립변수에 포함된 조건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조건하에 소득이 높을수록 저축하는 가계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Heckman분석의 2단계로 저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역시 공교육비(등록금), 사교육비 등 교육비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공교육비(등록금)의 경제적 부담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지출의 경우와는 다르게 공교육비(등록금)의 액수보다는 공교육비(등록금)로 인해 갖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저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중 이승신(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 외에도,

소득, 대학생 자녀수, 가구원수가 가계저축액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생 자녀수가 많을수록 저축액이 증가하며, 가구원수는 많을수록 저축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교육비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대학교육비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역시 Heckman의 2단계 추정모델(Heckman's two-step estimation)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Heckman의 1단계 분석결과, 가계의 부채보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교육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대학생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계에서 부채를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Heckman 분석 2단계로 부채액 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교육비 요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매우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액 역시 높음을 의미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의 상황이 원활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 가구주지위가 기준집단인 상용임금근로자에 비해 다른 3집단이 모두가 부채액이 기준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지위가 상용임금근로자에 비해 다른 3집단의 부채액, 특히 임시·일용직의 경우 부채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정기적으로 정해진 월급을 받는 상용임금근로자에 비해 다른 직업을 가진 집단은 소득이 정기적이지 않고 변동가능하기 때문에 가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지역 가계가 기타지역에 비해 부채액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서울지역의 주택가격과 높은 생활비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0> 대학교육비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저축여부 : Probit(N = 563)		저축액 : OLS(N = 429)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공교육비(등록금)	0.0000	0.0002	-0.00762	0.08178	
사교육비	-0.0000	0.0001	-0.00474	0.06665	
소득	0.0002***	0.0000	0.13266***	0.02787	
공교육비(등록금)의 주관적 부담정도 (전혀부담안됨=1~매우부담=5)	-0.1221	0.0899	-146.25850**	43.97355	
가구주취업여부(비취업)*	-0.1100	0.1639	-54.14745	86.49690	
가구원수	0.1131	0.0854	-96.16888*	43.83069	
주택소유여부(비자가)*	0.4824**	0.1474	-137.59279	119.63225	
맞벌이유무(비맞벌이)*	0.0821	0.1364	30.23403	65.09491	
가구주연령제공	-0.0002*	0.0001	0.10377	0.06320	
가구주학력*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0260	0.1507	51.05708	78.32947
	대학교이상	-0.0929	0.1984	-22.53524	98.81400
가구주지위 (상용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0.0284	0.2169	172.52635	118.31682
	고용주	-0.2138	0.2067	30.43080	103.86734
	자영업자	-0.0149	0.1624	-32.73158	84.15581
거주지역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0.0395	0.1973	-88.04673	92.64764
	광역시	-0.1146	0.1798	16.14838	90.26557
	수도권	-0.1592	0.1862	69.09295	93.17115
상수	0.5906	0.5256	-200.75199	259.62313	
Log likelihood	-258.7464975				
Lambda(λ) ²⁾			95.66305*	48.39453	
F값			15.25***		
Adjusted R ²			0.428(0.400)		

주. *는 가변수(dummy variable)화 한 것임; ()안은 준거집단.

* p < .05 ** p < .01 *** p < .001

2) 종속변수가 0보다 큰 값을 갖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2단계 OLS에서 편향되지 않은 일치 추정치(unbiased and consistent estimates)를 얻기 위해, 1단계 Probit 분석 결과를 토대로 inverse Mill's ratio(λ)를 계산한 후 이를 2단계 모델에 투입함(차경옥, 정순희, 2006).

〈표 11〉 대학교육비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독립변인부채여부 : Probit(N = 563)		부채액 : OLS(N = 373)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공교육비(등록금)	-0.0000	0.0002	0.38634	1.12859	
사교육비	0.0004*	0.0002	-0.13493	0.99826	
소득	-0.0000	0.0000	1.04104***	0.22631	
공교육비(등록금)의 주관적 부담정도 (전혀부담안됨=1~매우부담=5)*	0.0426	0.0769	743.18202	688.76334	
가구주취업여부(비취업)*	-0.1214	0.1430	-1804.48594	1298.85664	
가구원수	0.0865	0.0736	193.26518	626.84075	
주택소유여부(비자가)*	0.0934	0.1381	611.40802	1276.55780	
맞벌이유무(비맞벌이)*	0.1654	0.1184	-658.47168	1288.00334	
가구주연령제곱	-0.0001	0.0001	0.05163	0.77476	
가구주학력*	고등학교	-0.1879	0.1386	-24.95190	1331.89111
(중학교 이하)	대학교이상	-0.1902	0.1767	1577.58946	1605.70642
가구주지위*	임시·일용직	0.2920	0.2091	5409.64017**	1730.41672
(상용임용근로자)	고용주	0.3269	0.1763	4677.08237*	1843.61407
	자영업자	0.0307	0.1457	2130.91542	1112.74879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0.1896	0.1717	2991.68475*	1469.91219
(기타지역)	광역시	-0.0542	0.1583	-1546.61744	1264.92860
	수도권	-0.0941	0.1627	1862.97987	1365.10627
상수		0.5853	0.4645	5877.26583	5945.40745
Log likelihood	-347.9008905				
Lambda(λ)			-1435.14191	1467.41436	
F값			4.72***		
Adjusted R ²			0.212(0.167)		

주. *는 가변수(dummy variable)화 한 것임; ()안은 준거집단.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생 자녀를 가진 가계 중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563가계를 대상으로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를 살펴보고 대학교육비 지출이 가계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가계의 공교육비(등록금)는 연 617만원, 사교육비 연 492만원으로 총 대학교육비는 연 1,109만원으로 연소득(4,050만원)의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공교육비(등록금)는 21.5%, 사교육비 15.9%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가계의 대학교육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정도를 반영해 주고 있다. 실제 본 연구결과 내용 중 대학교육비(등록금)에 대해 56.8%가 매우 부담, 27.7%가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아울러 대학교육비는 물론 이를 구성하는 공교육비(등록금), 사교육비 모두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와의 대학교육비 지출

의 편차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고용관행인 우리나라에서 빈익빈 부익부 내지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가계의 소득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소득수준별 공교육비(등록금), 사교육비 지출액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일수록 필요로 하는 대학교육비, 특히 사교육비를 충분히 지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가계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학교육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대학유형을 국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공교육비(등록금),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살펴본 결과, 대학교육비 평균이 국립대 798만원, 사립대 1,168만원으로 나타나 사립대가 국립대에 비해 약 1.5배 정도의 비율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사립대에 재학 중인 가계의 소득수준(4,145만원)이 국립에 재학 중인 집단(3,552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상대적으로 사립대

에 보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반면 사교육비 지출액은 대학유형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학유형별 대학교육비의 차이는 공교육비(등록금)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립대학의 공교육비(등록금) 수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립대학의 법인화 문제를 공교육 서비스의 중요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공교육비(등록금)와 사교육비가 가계지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결과, 매우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비(등록금)의 수준과 사교육비의 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지출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대학교육을 위한 지출은 다른 가계지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밝혀졌으며, 이는 대학교육비 지출이 부모의 은퇴준비 역시 위축시킬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넷째, 대학교육비를 제외한 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에 공교육비(등록금)와 사교육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결과, 공교육비(등록금)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사교육비가 부정적인 영향, 즉 사교육비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교육비를 제외한 소비지출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교육비(등록금)의 경우, 1년에 2회 지출이 발생하며 대략적으로 미리 예측(고정지출의 특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계가 저축 등을 통하여 미리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사교육비는 다른 생활비처럼 매월 혹은 매일 지출이 발생하며 다른 가계 지출비목과 같이 변동지출의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즉, 공교육비(등록금)의 경우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다른 소비지출 비목에 소득을 할당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사교육비의 경우는 다른 소비지출 비목과 서로 그 특성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공교육비(등록금)와 사교육비는 가계부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조사대상가계의 재무적 특성 중 부채의 원인을 질문한 결과 20.4%가 교육비라고 응답하여 대학교육비가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 바와 다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론을 기초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자녀 가계의 가구주 연령이 40~50대가 대부분이며, 은퇴준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중한 대학교육비는 부모의 은퇴준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정책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모든 나라의 대학교육비 지원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미국 등지에서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스스로 대학교육비

를 충당함은 물론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즉,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학생은 원하면 누구든지 저리의 학자금 용자를 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 취업이 되면 그 때부터 자녀 스스로 용자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자금 용자시스템은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 후에는 학생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하고 부모가 대출 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결국 자녀의 대학교육비가 부모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우리나라 대학 학자금 용자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교육과학기술부는 미국의 대학 학자금 대출시스템과 동일한 취지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2010년 1학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헤럴드경제, 2010. 01. 24).

둘째, 현재 사립대학의 공교육비(등록금) 수준은 국립대학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화 시키고 있지만 실제의 타당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공교육비(등록금) 자율화정책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대학의 법인화 추진은 공교육서비스의 중요성을 간과한 처사라고 판단된다.

셋째, 대학교육비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소득을 통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충분한 집단은 대학교육비의 부담이 커도 괜찮지만 소득이 낮은 집단은 대학교육비에 대한 부담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이유로 가난의 대물림이나 신분의 대물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수준이 많은 것을 결정하는 사회체제 내에서 국립대학의 교육서비스는 국민의 소득불균형을 최소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부모세대의 소득불균형이 세대가 거듭되면서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인 대학교육의 기회가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으로 인하여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넷째, 대학교육비의 부담이 경감 된다면 일반 가계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간접적으로는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육비 지원시스템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계곤란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가 많지 않고, 가계곤란자를 위한 장학예산은 미미한 실정이다. 소득에 따른 교육의 차별화를 해소하기 위해 장학제도,

기부문화, 정부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공교육비(등록금)은 물론 사교육비 지출 역시 가계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 자녀가 스스로 사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대학생의 의식을 바꾸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들이 방학동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인턴십 등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저소득층의 대학교육비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변수의 제약으로 인해 대학교육비가 가계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또한 결측치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통계적인 평가에 의해서 결측치를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자료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학생의 교육비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경자(2007).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교육비 지출액과 지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111-120.

김민정(2005). 도시가계의 사회계층별 소비양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시월(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 연구. **소비자학연구**, 10(3), 101-121.

김우영, 김현정(2009).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인숙, 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37-149.

박미희, 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서울신문(2007. 07. 04). 은퇴후 적정생활비 월 150만~200만원. www.seoul.co.kr/news.

양세정, 이윤금(1997).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자녀수와 자녀성(性)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8(2), 81-101.

이성림(2002).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관한 시계열 분석. **대한**

가정학회지, 40(7), 101-118.

이성림(2005a).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이성림(2005b). 과소비·부채가계의 가계경제구조 분석-과소비·부채가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6(1), 73-95.

이승신(2002).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40(7), 211-227.

이정미(2008). **대학의 교육비와 수익률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학식, 임지훈(2005). **SPSS 12.0 매뉴얼**. 서울: 법문사.

정영숙(1999). 사교육비 지출이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0(4), 61-73.

차경옥, 정순희(2006). 대학교육비 지불원천에 관한 분석: 소득, 저축, 학자금대출의 사용여부와 사용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251-270.

참여연대(2008. 02. 12).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보고서**. 서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최현자(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최현자, 김정현, 김민정(2008). 가계의 저축의사결정. **소비자학연구**, 19(4), 211-237.

하준경(2006). 가계의 교육비 지출증가와 금융시장. **금융브리프**, 15(13), 3-7.

한국노동연구원(2007).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코딩북**.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4). **대학 등록금 책정 실태 조사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투자자교육재단(2008). **2007 펀드투자자조사 요약본**. 서울: 한국투자자교육재단.

헤럴드경제(2010. 01. 24). 교과부 이 달 안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상환 시행령 확정.

현대경제연구원(2007. 04. 30). **사교육, 노후 불안의 주된 원인 요약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MBC NEWS(2008. 09. 29). 학자금 대출 '신용유위' 급증.

OECD(2007). Education at a Glance. <http://www.oecd.org/edu/eag2007>.

접 수 일 : 2010년 1월 4일
 심사시작일 : 2010년 1월 6일
 게재확정일 : 2010년 2월 11일